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여건과 기업유치전략

김인중(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정보센터 소장)

. 서 론

- 2003년 들어서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
- 지역불균형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민통합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화 : 인구 46.6%(2001년), 조세수입비중 70.9%(2001년) GRDP 47.0%(2001년), 30대기업 본사 88.5%(2001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사안에 따라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지방화시대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
- 국토균형발전의 추진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주도로 바뀌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임.
- 그러나 여기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사후적인 결과의 평등보다는 사전적인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지역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지역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임.

- 국내적으로는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수도권 입지규제완화와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의 지정 등으로 인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충청권의 경우 오히려 기업입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문제, 세계화의 가속화로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임.
 - 특히 중국은 경제특구를 자원 집중과 시장경제 확산의 전진기지로 삼아 경제·사회 전체의 개방에 성공하여, 이른바 세계 투자의 ‘블랙 홀’로 부상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자체는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지원의 타율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창업 촉진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 등의 지역산업발전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II. 충남의 산업발전 여건¹³⁾

1. 인문·사회환경

1) 지리적 위치

-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 면적은 8,586.4km²로 남한 전체 면적(99,816.48km²)의 8.6%를 차지.
- 국도 1호선, 경부·호남선 철도, 경부·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관통하고 있어 수도권과 국토의 동남부와 서남부를 연결시키는 국

13) 충청남도 및 충남발전연구원의 자료 협조

내 지역간 교류중심지 역할을 수행.

- 충남의 모든 시·군은 수도권과 1~2시간 거리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개발압력의 1차적인 흡수·완충기능을 수행하며 행정수도 이전의 적지로 부상.

2) 인구

- 충남의 총인구는 2001년 말 현재 1,928천명으로 전국의 3.99%를 차지하고, 1990~1995년 사이에는 연평균 -1.8%씩 감소하였으나 1995년을 정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시·군별 인구분포는 천안시(21.9%), 아산시(9.6%), 서산시(7.8%), 논산시(7.4%), 공주시(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인구가 충남인구의 46.4%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서북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2000년).
- 충남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는 0~14세의 연령층과 15~44세 연령층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45세 이상의 구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12.0%)가 전국 평균(7.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가 심함.

<표-1> 충남의 인구

구 분	1990	1995	2000	2001	(단위 : 천명, %) 연평균변화율	
					'90~'95	'96~'01
전 국	42,869	45,982	47,977	48,289	1.4	0.6
충 남	2,028	1,855	1,930	1,928	-1.8	0.5
구성비	4.73	4.03	4.02	3.99	-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표-2> 충남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단위 : %)

2000년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전 국	21.2	25.2	26.6	19.6	7.3
읍부	22.6	22.5	25.9	19.4	9.5
면부	16.5	19.6	19.7	26.2	18.0
동부	21.8	26.4	27.7	18.7	5.4
충 남	20.2	23.3	23.0	21.4	12.0
읍부	21.3	23.8	24.1	20.8	10.1
면부	16.2	21.7	18.6	25.7	17.8
동부	24.7	25.1	28.2	16.1	5.8

자료 :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000.

3) 생활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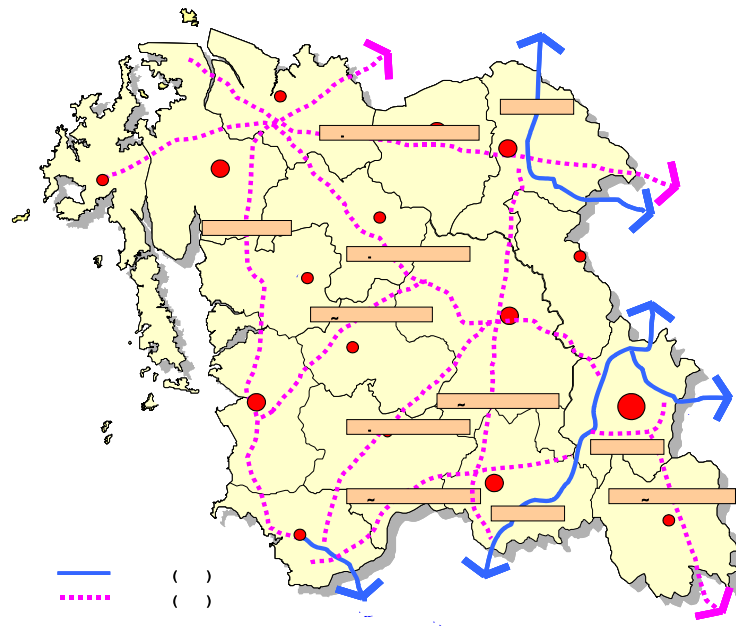
○ 거점도시의 편재

- 대전광역시와 천안시가 대전·충남지역 전체 중심기능의 각각 32.2%와 7.4%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중심이 각각 동남, 동북에 편재되어 있음.
- 따라서 도청이전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고려하고, 충남 전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거점지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지역교통망의 취약

- 현재 충남의 지역간 교통망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남북을 연계하는 교통체계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서북부지역~대전간, 서부해안~중부내륙간의 동서기간교통망이 미흡함.
- 그러나 천안~논산 고속국도,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의 개통과 함께 앞으로 계획중인 보령~공주간 고속국도, 당진~대전간 고속국도 등이 완공되면 충남의 교통망은 상당히 개선될 것임.

[그림-1] 고속도로 확충구상도



2. 산업·경제 현황

1) 산업구조

- 충남의 산업총생산액은 2000년 현재 20조 560억원에 이르며, 산업구조는 1990년 농림어업 27.5%, 광공업 27.0%, 서비스업이 45.5%에서 2000년에는 농림어업 15.5%, 광공업 39.2%, 서비스업이 45.2%로 광공업비중의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 전국 평균에 비해서 2000년 현재 농림어업의 비중은 거의 2.5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10% 포인트 낮게 나타남.
- 충남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나 농림어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면, 문화관광의 시대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음.

<표-3> 충남의 산업구조

(단위 : 10억원, %)

구 분	전 국						충 남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산업총생산	228,052	100.0	340,463	100.0	450,217	100.0	8,268	100.0	13,672	100.0	20,056	100.0
농림어업	19,730	8.7	22,871	6.7	24,332	5.4	2,272	27.5	2,660	19.5	3,117	15.5
광업	1,138	0.5	1,063	0.3	846	0.2	65	0.8	91	0.7	76	0.4
제조업	76,078	33.4	108,350	31.8	174,400	38.7	2,166	26.2	3,859	28.2	7,788	38.8
서비스업	131,107	57.5	208,179	61.1	250,640	55.7	3,765	45.5	7,063	51.7	9,075	45.2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2) 제조업 현황

- 2000년 현재 제조업체수 10,819개, 종업원수 140,043명, 제조업생산액은 9조 3,520억원임.
- 충남 제조업의 생산액 기준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1998년에 화합물및화학제품업(22.7%),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12.3%), 자동차및트레일러업(9.4%), 기타기계및장비업(8.1%), 제1차금속업(7.4%), 고무및플라스틱업(5.8%) 순으로 나타남.
- 연평균 성장속도는 기타운송장비업이 55.9%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정밀광학기기와시계업(48.7%), 자동차및트레일러업(47.2%),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39.6%), 기타기계및장비업(36.3%)순으로 나타나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4> 충남의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단위 : 백만원, %)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 과제 / 한무호

구 분	1991		1995		1998		연평균 증가율		
							91-95	95-98	91-98
섬유제품제조업	392,035	9.3	785,503	6.1	929,783	5.1	19.0	5.8	13.1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71,258	1.7	77,722	0.6	65,089	0.4	2.2	-5.7	-1.3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00,700	2.4	130,931	1.0	63,973	0.4	6.8	-21.2	-6.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0,165	0.7	74,864	0.6	84,339	0.5	25.5	4.1	15.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5,443	7.0	943,814	7.3	1,258,046	6.9	33.7	10.1	23.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3,622	1.0	124,105	1.0	127,502	0.7	29.9	0.9	16.6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574,219	13.6	804,640	6.2	-	-	8.8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53,484	15.4	2,505,125	19.3	4,131,324	22.7	39.9	18.1	30.1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201,637	4.8	545,427	4.2	1,059,692	5.8	28.2	24.8	26.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76,040	16.0	1,028,774	7.9	878,968	4.8	11.1	-5.1	3.8
제 1 차금속산업	246,894	5.8	911,970	7.0	1,338,204	7.4	38.6	13.6	27.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52,200	3.6	580,173	4.5	980,480	5.4	39.7	19.1	30.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9,026	4.0	1,316,881	10.2	1,477,845	8.1	67.1	3.9	36.3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제조업	-	-	212,947	1.6	312,574	1.7	-	13.6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204,539	4.8	830,353	6.4	695,788	3.8	41.9	-5.7	19.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16,417	5.1	1,200,378	9.3	2,234,515	12.3	53.5	23.0	39.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6,062	0.6	186,004	1.4	419,783	2.3	63.4	31.2	4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4,272	2.7	510,265	3.9	1,711,726	9.4	45.4	49.7	47.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746	0.3	49,086	0.4	240,777	1.3	46.2	69.9	55.9
가구 및 기타 제조업	57,913	1.4	124,673	1.0	157,911	0.9	21.1	8.2	15.4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15,144	0.1	25,600	0.1	-	19.1	-
합 계	4,236,672	100.0	12,958,779	100.0	18,193,919	100.0	-	-	-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1998년 생산액 기준의 입지계수의 경우, 음식료품(1.55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2.085), 코크스, 석유정제품(2.087), 화합물 및 화학제품(1.516), 고무 및 플라스틱(1.182), 비금속광물제품(1.044), 조립금속제품(1.04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품(1.806) 등 8부문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5> 충남 제조업의 입지계수(생산액 기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토론회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음식료품제조업	2.340	2.086	2.253	1.959	1.935	1.699	1.577	1.554
섬유제품제조업	1.060	0.794	0.883	0.911	0.962	0.923	0.775	0.692
의복 및 모피제품	0.466	0.317	0.189	0.198	0.174	0.232	0.212	0.156
가죽가방마구류신발	0.587	0.613	0.581	0.645	0.582	0.462	0.491	0.215
목재및나무제품	0.543	0.643	0.724	0.654	0.581	0.526	0.554	0.56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2.202	2.142	2.214	2.222	2.376	2.300	2.204	2.085
출판, 인쇄및기록매체	0.529	0.540	0.484	0.364	0.437	0.409	0.314	0.317
코크스, 석유정제품	2.323	1.794	1.630	1.398	1.187	2.087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96	1.905	1.771	1.812	1.809	1.414	1.371	1.516
고무 및 플라스틱	1.012	0.873	0.815	0.913	0.938	1.070	1.110	1.182
비금속광물제품	2.595	1.847	1.950	1.725	1.629	1.360	1.155	1.044
제 1 차금속산업	0.526	0.400	0.352	0.477	0.712	0.864	0.813	0.594
조립금속제품	0.687	0.758	0.811	0.870	0.828	0.980	1.012	1.047
기타기계및장비	0.370	0.559	0.960	0.990	1.031	0.975	0.987	0.936
사무계산회계용기계	-	2.201	1.192	0.371	0.979	1.170	0.395	0.414
기타전기기계및전기	1.202	1.116	1.467	1.717	1.601	1.390	0.662	0.843
영상음향및통신장비	0.424	0.847	0.543	0.748	0.633	0.692	0.863	0.728
의료,정밀,광학기기사계	0.491	0.558	0.772	1.371	1.183	1.118	1.075	1.8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0.249	0.224	0.250	0.322	0.352	0.341	0.941	0.900
기타 운송장비	0.075	0.066	0.073	0.131	0.108	0.079	0.068	0.220
가구 및 기타	0.442	0.377	0.460	0.391	0.425	0.393	0.459	0.436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	1.080	0.807	0.486	0.502	0.599

- 광공업체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천안시(31.7%), 아산시(12.7%), 논산시(7.3%), 연기군(7.1%), 금산군(6.0%) 순으로 나타나 광공업체의 대부분이 서북부지역과 대전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최근에는 서천군(15.2%), 당진군(13.1%), 태안군(12.5%), 금산군(10.0%), 서산시(9.0%)의 광공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지방재정

- 2002년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28.4%로서 전국평균 54.6%에 훨씬 못 미치며, 전남북, 강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임.
- 세입예산구조는 총예산(순계) 1조 8,006억원 중 자체수입이 31.4%, 의존재원이 65.3%, 지방채가 3.4%를 차지함.

-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의 독자적인 연구개발투자지원 등 지역산업발전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6>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

(단위 : %)

시·도별	시·도별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 평균	54.6	79.8	34.6	47.5	19.1	46.0
서울	95.6	94.7	—	—	—	54.5
부산	69.5	66.1	—	—	40.9	39.6
대구	69.0	64.9	—	—	44.2	40.5
인천	74.2	73.1	—	—	22.8	39.3
광주	61.5	56.7	—	—	—	31.3
대전	73.5	69.3	—	—	—	32.9
울산	67.1	60.8	—	—	58.5	47.0
경기	76.5	—	70.1	73.5	35.9	—
강원	26.9	—	22.1	29.9	17.9	—
충북	32.8	—	26.1	43.8	21.2	—
충남	28.4	—	22.4	29.8	20.0	—
전북	26.3	—	17.5	32.1	15.4	—
전남	20.4	—	13.7	29.7	12.2	—
경북	30.0	—	23.3	33.7	18.1	—
경남	35.9	—	29.6	42.2	15.9	—
제주	33.8	—	30.4	34.5	20.0	—

- 주 : 1.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을 공제).
2.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규모로 산출.

3. 인적 자원

- 전문대학은 10개교로 공주시 2개교, 천안시에 3개교, 홍성군에 2개교, 보령시, 청양군, 당진군에 각각 1개교씩 분포되어 있음. 2000년 현재 입학자수 13,996명, 졸업자수는 8,021명으로 취업률은 74.5%를 보이고 있음.
- 4년제 대학교의 경우 2000년 현재 19개교가 있으며, 그 중 천안시에 8개

교, 연기군에 3개교, 논산시에 2개교, 공주시, 서산시, 아산시, 홍성군, 부여군에 각각 1개교씩 분포되어 있음. 19개교 835개의 학과에 입학자수는 30,585명, 졸업자는 13,851명임.

- 대학원 학과는 2000년 현재 총 51개가 있으며, 학생수는 석사과정이 5283명, 박사과정에 281명임.
- 충남지역의 대학 입학자, 졸업자,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2000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아직 50%대 수준에 머물러 전국평균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충남에는 현재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홍성기능대학이 있으며, 서북부지역 단지 중점개발과 기업체 증가로 인해 부족이 예상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아산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첨단직종 5개학과에 56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 또한 충남직업전문학교를 강경으로 이전하여 강경기능대학을 설립, 5개학과 400명을 목표로 200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임. 강경기능대학이 완공되면 연 1,135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신규노동력 공급능력은 2000년 현재 23,694명임. 이중 대학출신이 15,219명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도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산업인력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인력(군제대자)을 고려할 때 연간 25,000명 이상으로 추산됨.

4. 사회간접시설

1) 교통·물류시설

가. 도로시설

- 충남의 도로연장은 6,023km로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로 등급별 전국의 총 도로연장과 비교하여 보면 고속도로가 3.9%인 78.5km, 일반국도는 9.6%인 1,190.8km, 지방도는 10.0%인 1,709.9km, 시·군도는 8.0%인 3,028.8km로 나타남.

<표-7> 시·도별 도로현황(1999. 12. 31. 기준)

시도별	연 장(km)	포 장(km)	미개통(km)	포장율(%) (미개통포함)	포장율(%) (미개통제외)	면 적(km ²)	도로밀도 (km/km ²)
계	87,534	65,356	6,472	74.7	80.6	99,774.72	0.88
서울	8,036	7,069		88.0	88.0	606.37	13.25
부산	2,553	2,493		97.7	97.7	753.19	3.39
대구	1,979	1,933	10	97.6	98.1	885.53	2.24
인천	2,032	1,854	22	91.2	92.2	957.64	2.12
광주	1,805	1,158	645	64.2	99.8	501.15	3.60
대전	1,433	1,399		97.6	97.6	539.79	2.66
울산	2,166	1,361	772	62.8	97.6	1,055.72	2.05
경기	11,183	9,080	1,144	81.2	90.5	10,190.73	1.10
강원	7,842	5,347	118	68.2	69.2	16,873.72	0.46
충북	6,042	3,966	640	65.6	73.4	7,432.72	0.81
충남	6,023	4,359	223	72.4	75.1	8,584.76	0.70
전북	6,087	4,244	287	69.7	73.2	8,047.54	0.76
전남	7,998	5,868	391	73.4	77.1	11,963.79	0.67
경북	9,299	6,466	398	69.5	72.6	19,022.93	0.49
경남	10,474	6,694	1,720	63.9	76.5	10,513.25	1.00
제주	2,581	2,066	102	80.0	83.3	1,845.89	1.40

자료 : 건설교통부, 시도별 도로현황, 2000.

- 충청남도의 도로연장 중 시·군도 비율이 가장 많은 50.4%로 나타나 지역간 연결도로인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도로연장 밀도는 전국 0.88km/km²에 비해 낮은 0.70km/km²임. 인구와 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의 경우 전국이 1.27, 충청남도는 1.48로 전국에 비해 약간 상회한 정도이나 충남의 도로가 지역간 연결도로인 고

속도로나 일반국도에 비해 시·군도의 도로연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로의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임.

나. 철도시설

- 충남의 철도연장은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충북선 등 4개 노선과 강경선, 남포선, 서천화력선 등 3개의 지선을 포함하여 7개 노선에 총연장 268.1km이며, 철도역은 경부선의 성환역~매포역, 호남선의 두계역~강경역, 그리고 장항선의 모산역~장항역 등 총 45개 역이 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은 복선임.
- 경부 및 호남선은 복선철도이나 각각 도내의 동북단과 동남단에 치우쳐 있어 통과수송 위주로써 지역내 여객 및 물동량 수송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지며, 나머지 3개의 지선철도는 극히 일부지역만 접속하여 내륙지방의 철도여건이 미약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표-8> 철도시설 현황

(단위 : km, %)

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전 국		3,124.7	-
충 남		268.1	-
전 국 대 비		8.6	-
경 부 선	성 환 ~ 매 포	60.1	복 선
호 남 선	두 계 ~ 강 경	30.1	복 선
장 항 선	모 산 ~ 장 항	143.1	단 선
강 경 선	채 운 ~ 연무대	9.0	단 선
충 북 선	조치원 ~ 봉 양	4.4	단 선
서 천 화 력 선	간 치 ~ 동백정	17.1	단 선
남 포 선	남 포 ~ 옥 마	4.3	단 선

자료 : 대전지방철도청, 철도통계연보, 1999.

- 충남의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은 남북간 연결에 비하여 동서간의 간선 교통망 구축이 절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이 전무한 상태이고, 충남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가 없어 지역간 접근성이 낮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심도시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여가문화의 발달을 가져와 향후 태안 해안국립공원, 안면도 국제관광지 등 충남 서해안권에 대한 관광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관광수요를 육상교통으로 처리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철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다. 항만시설

- 충남의 항만시설은 보령항, 대산항, 장항항, 아산항, 태안항 등 무역항 5개소와 국내 연안을 오가는 화물선, 여객선, 어선의 입출항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연안항은 보령시 대천항과 서천군 비인항 2개소로 접안능력은 전국 항만(584선석)의 4.3%인 25선석이며, 하역능력은 전국 357,351천톤/년의 11.1%인 39,814천톤/년임.

<표-9> 항만시설 현황

구 분		항만지정 일	항 내 수 면적(km ²)	수심 (m)	유속 (N/S)	조위차 (m)	접안능력	하역능력 (천톤/년)
무 역 항	계	-	439.70	-	-	-	25선석	39,814
	보령신항	'83. 8.30	47.00	14~28	1.4~2.0	7.8	2선석	9,715
	대 산 항	'91.10.14	62.00	11~40	3.2~4.4	9.2	16선석	21,735
	장 항 항	'68. 1. 4	1.10	2~9	1.6	7.0	2선석	660
	아 산 항	'86.12. 5	320.00	1~14	1.5	8.1	4선석	2,229
	태 안 항	'98. 2.24	9.60	18~19	3.0~4.0	5.2~7.0	1선석	5,475
연 안 항	계	-	8.43	-	-	-	465척	196
	대 천 항	'68. 1. 4	0.43	1~10	1.4~2.0	7.9	392척	196
	비 인 항	'68. 1. 4	8.00	18~19	2.0~8.0	7.1	73척	-

자료 :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2000.

- 그 동안 산업단지 및 발전소 전용항만 위주로 개발되어 일반화물처리를 위한 공용항만은 전무한 상태임.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단지가 조성된 대산항 및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 태안, 당진항은 유류 및 유연탄 전용항만으로 컨테이너, 철재 등을 위한 일반화물부두가 없어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물 등이 도로를 이용하여 외국 또는 타 지역으로 운송되고 있는

실정임.

- 충남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수도권외곽도로의 과밀로 인한 산업기능을 수용할 대안지로 부상되고 있음. 따라서 신산업지대 형성 및 대중국과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항만 건설이 시급한 실정임.

라. 물류시설

- 물류시설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한 물류시설은 서천군 38개, 부여군 34개, 당진군 27개, 공주시 16개임.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물류시설은 아산시 26개, 당진군 19개, 홍성군과 예산군에 각각 10개씩 분포되어 있음.
- 보령시와 연기군에는 각각 1개씩 있으며, 보령시의 물류시설은 현대시멘트 대천공장으로 시멘트를 취급하며,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시설은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음.

2) 산업단지

- 충남의 국가산업단지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천안외국인전용단지, 대죽자원비축단지, 고정국가산업단지 등 6개가 있으며, 총 지정면적은 3,852만㎡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천안외국인전용공단, 고정국가산업단지를 등을 제외하고는 가동중인 업체는 전무한 상태임.
- 충남의 지방산업단지 및 기타 산업단지는 총 25개 단지에 3,367만㎡이며, 220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이중 천안 제1산업단지를 비롯하여 9개의 지방산업단지와 계룡 왕대단지를 비롯한 4개 기타 산업단지에 203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성거산업단지, 천안 산업기술산업단지, 관창산업단지, 인주1산업단지 등 13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 및 준비중에 있음.
- 지방산업단지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천안, 연기이며, 주요 업종은 기계·장

비, 조립금속, 자동차트레일러, 석유화학 등임.

- 한편 농공단지에는 15개 시·군에 총 58개소, 9,130천㎡에 605개 업체가 입주 하였으며, 그 중 48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음.
- 산업단지 수요는 북부지역의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등과 서남부지역인 보령, 서천, 그리고 대전근교인 연기에서 많이 나타남.

<표-10> 국가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산업단지명	위치	규모	조성기간
계	6개소	38,518	
장항국가산업단지	서천 장항	14,712	1995~2001
아산국가산업단지	당진 고대·부곡	5,343	1992~2001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 석문	12,084	1992~2001
천안외국인전용단지	천안 백석	714	1992~1999
대죽자원비축단지	서산 대산	909	1997~2002
고정국가산업단지	보령 구교	4,749	1992~2002

자료 : 충청남도 공업기술과, 2001

3) 광역용수 공급시설

- 기 존 : 대청광역상수도(북부지역), 금강광역상수도(남부지역)
 보령담광역상수도(서해안), 아산공업용수도 I (서북부지역)
- 건 설 중 : 대청광역상수도Ⅱ단계, 아산공업용수도Ⅱ단계사업
- 확충계획 : 군장공업용수도,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 충남의 공업용수 사용량
 - 261.2천톤/일(1999년)
 - 용수원별 : 공업용수도 109.5, 지방상수도 31.6, 지하·하천수 120.1천톤/일
- 충남의 공업용수 공급현황을 보면 시설용량은 292.5천톤/일에 비하여 용수사용량은 109.5천톤/일에 불과하여 시설용량은 충분함.
-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서해안지역 개발에 따라 공업지역의 지속적 증가로 공업용수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5. 관광자원

1) 자연관광자원

- 충남에는 자연공원,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 자연경관자원이 풍부함. 자연공원으로는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비롯해 6개소가 있으며, 아산시 온천과 보령해수욕장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계룡산, 대천해수욕장, 백마강,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 예당저수지, 안면도 송림휴양림 그리고 삼교호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관광 명소임.

<표-11> 자연관광자원 현황

구 분	관광자원
자연공원	계룡산, 태안해안국립공원, 덕산,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고북저수지군립공원
지정관광지	대천해수욕장, 구두레, 신정호, 삼교호, 태조산, 예당저수지,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각원사,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금강하구둑, 마곡사, 칠갑산도립공원, 천안온천, 마곡온천,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2) 역사문화관광자원

- 충남을 대표할만한 문화자원으로는 지정문화재인 아산 외암전통마을을 비롯하여 계룡산 도예촌, 추사 김정희 고택, 한산 모시마을, 맹사성 고택, 한용운선생 생가지, 이상재선생 생가, 김좌진장군 생가지가 있고, 천안시의 독립기념관, 국립공주박물관, 서산시의 해미읍성, 정림사지 5층석탑, 현충사, 마애삼존불, 관촉사, 칠백의총, 비암사 등 시군별로 문화자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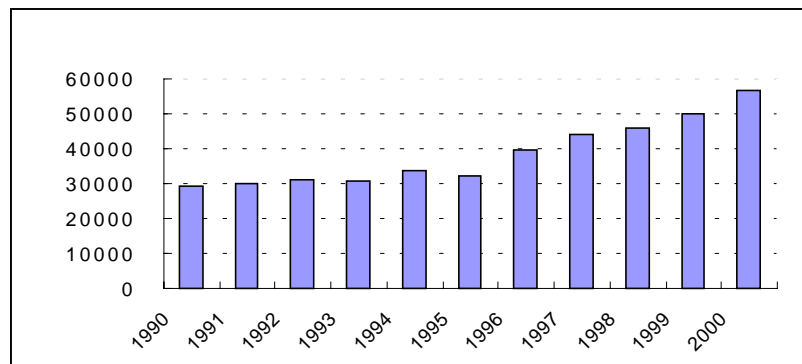
<표-12> 전통마을 현황

구 분	민속마을	소재지
지정문화재 전통마을	아산 외암마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기타 전통마을	계룡산 도예촌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추사 김정희 고택	예산군 산암면 용궁리
	한산 모시마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맹사성 고택	아산시 배방면 중리
	김좌진장군 생가지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한용운선생 생가지	홍성군 성곡리
	이상재선생 생가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통민속마을 관광상품화 방안, 1998.

- 충남의 관광객수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 29,274천명에서 2000년 567,960천명으로 연평균 6.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4,173천명과 6,785천명이 늘어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현재 해수욕장 관광객수는 20,615천명으로 총 관광객수의 36.3%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령시가 27.4%, 태안군이 17.2%, 아산시가 12.0%로 세 지역에서 총 관광객수의 5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산군(9.7%), 공주시(6.0%), 서천군(5.7%) 순으로 나타남.

[그림-2] 충남의 관광객수 변화추이(1990~2000)



Ⅲ. 산업발전 여건(SWOT 분석)

○ 강점

-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 기능의 최적의 대안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토론회

- 서해안 및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로 도약기반 확보
- 환황해권시대의 대중국 산업생산기지
- 관광문화시대에 백제문화 선양 가시화와 해양자원화 기회 도래
- 대학 및 고급인력 증대
- 약점
 - 대전시 분리, 지역중심권 취약
 - 정주 및 도시기반 취약
 - 재정자립 및 금융환경 취약
- 기회 요인
 - 지방자치제의 성숙으로 발전 도약단계
 -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 이미지 제고(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 부흥효과)
 - 수도권기업의 이전입지수요 확대 및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 위협 요인
 - 지자체간 경쟁과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산업입지 확대(우리기업 1천개 유치)

IV. 충남의 산업발전비전

1. 환황해 경제권 부상과 충청남도의 입지 잠재력 증대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극동을 포함한 환황해 경제권이 세계의 주요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서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철강 등의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산업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비금속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대중국 생산거점지역으로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 충청남도는 양호한 입지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거점항만 조성시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교류거점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계획은 오히려 정부축의 집중도를 또다시 강화시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는 공항·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이 취약한 충청남도의 성장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 3각 테크노밸리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 충남은 수도권 경제의 외연적 확대에 힘입어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아직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발전비전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충남의 산업발전비전은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발전과 공간적으로는 3각 테크노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북부권(천안~아산축)

- 대학, 연구기관, 고급인력의 집적지로서 지역혁신의 거점도시
- 지식기반 산업지구로 특화

-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규창업수요 수용
- 반도체, 영상 등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전자·정보산업 집적지, 자동차(부품)

- 서해안권(서해안고속도로)
 - 산업구조 고도화지구로 특화
 - 대중국 교역 및 산업거점
 - 철강, 석유·정밀화학, 기계 등

- 동·남부권(대덕연구단지근교축)
 - 첨단·벤처 산업지구로 특화
 -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국가적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대

- 동시에 IT, BT 등 신산업과 농림수산업 등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선진 농·림·축·수산업을 지향함.

3. 고속 간선교통·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국토중심지 기능 강화

- 충남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중심기능 및 산업기능 수용의 최적지로 부상할 것임.
- 국가 간선교통망 중간 결절지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국내 지역간 교통·물류·유통기능의 입지 잠재력이 증대되고, 수도권의 산업 및 경제기능의 대안적 입지 장소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임.
-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전철 등의 국가기간교통망 건설에 따라 역사 주변, 고속도로 IC 인근 등의 개발잠재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환경가치 증대에 따라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전원적 정주공간 수요증대

-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제근무제 등 환경변화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충남지역의 국내외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충남은 풍부한 자연환경 및 해양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충청남도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문화, 경관, 자연자원을 토대로 개성적인 지방문화와 첨단기술을 갖춘 쾌적한 전원형 정주공간으로서 매력이 증대될 것임.

V. 기업유치전략

1. 산업창출의 지역구상 -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에 부응 -

- 지자체는 내생적으로 혹은 외생적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돕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필요함.
 -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발전은 말 그대로 산업창출의 지역구상의 핵심이지만 단시일 내에 내생적 지역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 정도임. 이런 점에서 볼 때 내생적 지역산업발전정책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수도권에 비해 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외생적 지역산업발전정책은 당연한 것이며 지속되어야 함.

- 기업활동의 클러벌화에 따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서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유치전략은 더욱더 중요함.
-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산업정책이나 입지정책은 지역산업정책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또 지역산업정책은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자체는 당해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지역의 代表企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AS 등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지자체는 외국인투자유치사업단을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함.
- 동 사업단은 레드카펫사업 등을 추진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를 극대화함.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불문하고 기업의 입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함(경기도).

2.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간의 집적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혁신을 최대한 창출·확산·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시·도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음.
- 이는 국가산업정책의 지역산업정책으로의 중심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그러면 내생적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인 충남의 지역혁신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우선 충남의 전략산업으로는 산업발전 정도와 성장잠재력을 종합해 볼 때 전자·정보기기산업이 핵심임. 그밖에 자동차, 정밀

기기, 생물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충남의 전자·정보기기산업은 경기도와 구미에 이은 새로운 산업 집적지로서 서해안 시대를 리드할 전략산업임.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무선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부품 및 장비업체 그리고 천안의 문화복합단지과 연계된 영상미디어기기 분야를 집중 육성함.
-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기업지원서비스기관이 집적 및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해야 함.
- 기업, 대학, 연구소가 광역적으로 연계되며, 지역별로는 2~4개의 전략산업이 집중 육성됨.
- 전자·정보단지 조성 및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등 3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임(예 : 송도 테크노파크에 cGMP건립으로 외국 BT기업의 입주 촉진).
-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대 필요
- 경남도청은 매년 30억원을 지원하여 메카트로닉스, BT분야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발하였음.

3.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전용단지 지정 신청

- 외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국고로부터 토지구입, 표준공장건설, 세제 혜택 등

가장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충남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보다도 우선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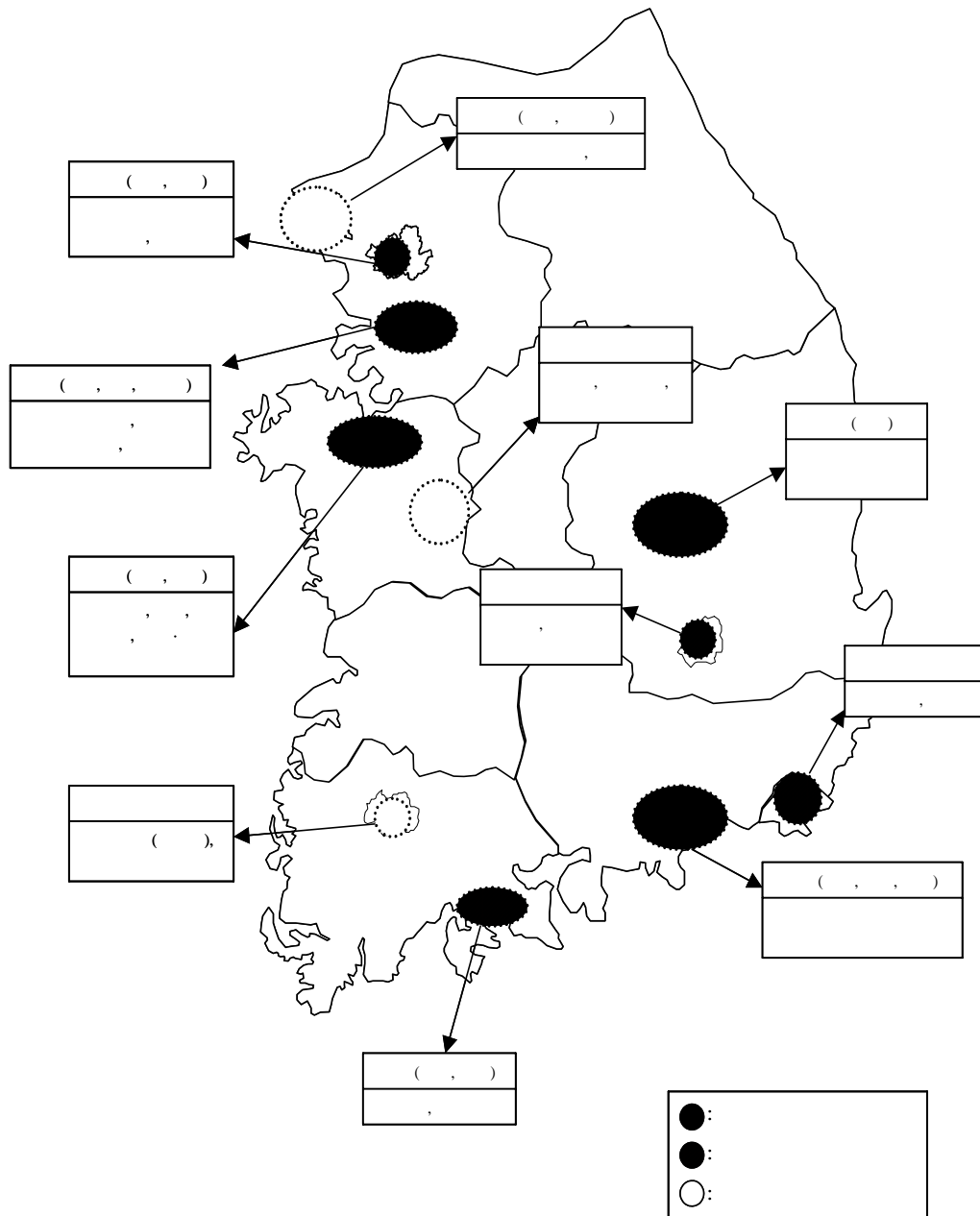
- 장항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군산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광역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설득력을 더할 것임(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
- 자유무역지역은 3개의 기존지역과 대불산단 신규지정,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등 확대일로에 있음.
- 충남의 경우는 석문단지와 장항단지를 예상 후보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임(평택항은 인천항을 보완하며, 새로운 서해안 산업벨트화에 대비하여 정비·확충되어야 함).
-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제고, 향후 서해안시대 교류 거점으로 당진~서산은 신산업지대 개발축으로 설정함.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을 매년 1개씩 추가 지정할 예정이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하는 지역별 투자유치전략을 검토하고 있음.
- 나아가 정부는 조세·입지 혜택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투자지원제도를 개편하여 고용보조금이나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소위 '캐시 그랜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지자체들은 이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2002년에 9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9.4%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도 기존의 천안, 광주 평동, 목포 대불, 경남 진사, 구미, 오창 이외에 매년 2~3개씩 신규 지정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므로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함.

4.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신청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임.
 - 지식기반산업은 지리적 집적을 통해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누림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때문임.
- 그러나 지식기반제조업 전반의 집적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시책은 취약한 상태임.
- 즉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 문화산업 등 개별산업 중심의 단지조성 시책은 존재하나 지식기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집적촉진시책은 없음.
 - 지식기반산업은 산업간 융합 현상이 두드러지고 산업간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지식기반산업은 혁신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산업환경 정비가 매우 중요함.
 - 기존의 산업단지만으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집적 강화에 한계가 있음.
-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집적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자체는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우선은 지식기반산업의 기존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지구가 지정될 예정임.
 - 기존 산업단지, 도시내 및 주변에 산재한 개별입지 기업, 혁신센터·테크노파크 등 혁신관련 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을 포괄하여 지구로 지정함.
 - 기본적으로 기존 집적지역의 구조고도화 차원에서 접근함.

- 동시에 지역간 중복이나 과당경쟁을 조정하고 집적지간 연계를 강화함.
- 신규 유망 집적지역은 산업 및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육성 지원함.
- 지원사업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환경의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연관기업의 집적 장애요인 해소,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둠.
- 집적지구 지정방안
 - 지정 기준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정도, 대학·연구소·기반시설의 구축 정도, 지자체의 집적지구 진흥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 지정 신청 → 지정 심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산자부장관 지정
 - 대상지역 선정 : 지식기반산업·연구개발클러스터·기업지원클러스터의 형성지표를 고려하여 지식기반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가능성이 높은 지역 선정(가능한 한 기존의 산업집적지역을 활용)
 - 충남의 경우는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가능성
- 집적지구의 관리 및 운영
 - 집적지구 독자의 상설 관리기구는 두지 않음.
 - 집적지구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함.
 - 집적지구내 관련 기관중 적합한 주체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함.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예상지역(예) >



5. 노사무분류 보장 선언

- 지자체는 기업을 '왕으로 · 평생고객으로' 받들어 모셔야 함.
- 기업을 존중하는 산업문화가 지역에서 보여야 기업이 마음놓고 이전할 수 있음. 그래야 국가발전,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함.

- 기업존중, 기업유치 산업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노사안정을 보장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노사무분규를 보장하는 지자체가 나옴직 한데 아직도 소식이 없음. 지자체 장에게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벤처정신이 필요한 때임.
 - 충남도나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勞使 無紛糾, 無規制’를 보증하는 선언을 하면 어떤지.
- 일본은 물론 유럽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노사분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함.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비교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 문제해결이 필수적임.
 - 노사무분규 보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현안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며,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함.
- 중앙정부는 그 대신 이것을 실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이전보조금 지원, 종업원 이주비 지원, 투자비 지원, 토지구입비 지원 등).
 - 특히 종업원 대책은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신규기업의 종업원 유치에 매우 중요함.
 - 2000~2002.8월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266건에 불과함.
-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러바마주에 자동차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각종 투자인센티브가 아니라 노사무분규 보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6. 지역산업 CEO 양성 및 유치

- 지난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스포츠 CEO 히딩크는 우리의 꿈을 선수와 함께 이루어주었고,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실제 눈으로 보여주었음.
- 전문 CEO는 스포츠나 민간 비즈니스 분야만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지역산업진흥이나 기업유치 사업에도 필수적임.

- 최근 정부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경영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성공시켜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프로젝트 CEO나 기업유치 전문가를 외국에서 유치하거나 국내의 관련자를 외국에 연수시켜 양성해야 함.
- 특히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산업발전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자 중앙의 각 부처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이 분야의 CEO 공급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역산업발전 관련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혁신센터, 사업화지원센터, 진흥센터, 창업보육센터, 소프트타운, 벤처프라자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
-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나지만 이를 운영할 전문경영자가 많지 않다는 데에 있음.
- 지역의 각종 혁신센터는 기업을 유치·견인하는 앵커기능을 담당하므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이끌고 나갈 유능한 인재를 찾고 키우는데 지자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 인재를 유치하고 키우는 것이 혁신센터 10개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

7. RDA(지역산업총괄조정기구) 설립 추진

-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과당경쟁이 초래된 인상임(RRC, TIC, TP 외에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각종 센터가 설립되어 전국의 센터화가 진행).
- 이러한 지역산업진흥 관련 시책들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 중복투자를 방

지하고, 이들 정책집행과 운영의 규모 및 범위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지역별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함.

- 이러한 전담기구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서 산자부는 현재 'R&D 기획평가진(클러스터진흥계획단)'을 구성하여 산업기술지도 작성,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D/B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임.
- 하지만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한정되어 지역산업정책 수립,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역산업육성 및 통상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가 힘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산업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바람직함.
-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지역개발기구'를 설립·운영중임.
- 한편 지역산업에 대한 부처간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협의체가 필요하고 산자부가 이것을 총괄함.
- 영국의 경우 중앙부처간 지역협의체 GO(government offices)를 설립·운영하고 지역개발기구와 긴밀한 협력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함.
- 동 기구의 설립·운영에 핵심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RDA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다시 말하면 중앙 및 지방공무원과 지역산업총괄조정기구간의 협력이 필요함.
- RDA는 공무원의 스피드와 유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8. 사업·생활 환경 개선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은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로 만들고 동시에 세계적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동북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하드인프라(물류, 생활 인프라 등)와 소프트 인프라(정보, 제도, 정책, 노동, 인력, 언어, 문화, 관습 등)가 갖추어져야 함.
- 마찬가지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 인프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특히 중요한 것이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생활여건과 사업자 서비스 등 사업 환경임.
 -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을 보육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원세트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외국인을 위한 전용주택, 쇼핑센터, 스포츠·레저·관광시설, 문화공간도 구비되어야 함.
 - 이는 문화, 종교, 관습 등의 측면에서 異文化를 수용하는 열린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임.
 - 외국기업의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나라를 마다하고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임.
 - 한편 금융, 무역, 법률, 회계, 컨설팅, 광고, 디자인 등 비즈니스서비스업도 지원되어야 함.
- 산업단지나 주거단지 등의 하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타지역과 차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 지자체는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가칭 ‘지방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9. 지역산업균형발전 보조금제도의 도입¹⁴⁾

-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주된 요인이 제조업 발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으로의 기업입지에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산업낙후 지역에서의 제조업체 신설이나 이전은 매우 부진함.
- 그간 정부의 산업낙후지역 지원시책은 대부분 SOC 확충 등과 같은 하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낙후지역 입지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효과는 미흡함.
-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낙후지역의 경제적 와해를 방지하고 국가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역개발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서도 낙후지역에서의 보조금 지급은 허용되고 있음.
- 따라서 더 나은 산업집적지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기업 본래의 성향을 상쇄하고 낙후지역으로의 기업이전과 신설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보조금(가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산업자원부가 시행토록 함.
- 산업낙후지역에의 기업 입지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공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선정지표 및 선정방법을 적용하여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원지역을 결정함.

14) 조세, 금융 등 거시경제 환경개선은 중앙정부가 담당

- 정부정책과 기업경영 목표간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신규 고용과 프로젝트 투자비용의 일정 비율 중 기업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채택함.
- 보조금의 재원은 지역산업과 관련된 예산 및 산자부의 소관자금 중 추가 확보가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조달하거나, 설치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